

□ 신년사 □

## 합리적 사고와 제도의 틀이 마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매년 이맘때면 지나간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게 된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다. 우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3월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天安艦沈沒事件)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무고한 해군 병사 40명이 사망하고 6명의 실종을 불러왔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을 규명한다고 하여, 한국을 포함한 미국, 스웨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의 24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려 노력한 결과, 북한의 단독적 군사도발로 결론이 났다. 이런 객관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시종일관 떠넘기기식 핑계로 일관하고 있고, 더욱 가관인 것은 남쪽의 일부세력 또한 이를 합리적, 과학적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를 늘어놓고 있고, 아직도 그런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 생명을 바쳐 이 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희생한 망인들의 명예에 또 한번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고 있다.

G-20 정상회의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질시라도 해서인지 11월이 가기 전에 북한이 또 한건 못된 짓을 해주었다. 이 못된 연평도 사건은 기존의 사건들과 격을 달리한다. 민간인 거주지인 연평도를 직접 타격하였다는 것이다. 전시에도 전쟁범죄로 간주되는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이제는 대놓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해병대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6.25전쟁 이후 각 정권마다 대북정책의 기초가 이르렀다 저리렀다 '갈짓자' 행보를 하는 사이,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일

정 상 훈  
(월간 고시계 · 도서출판 고시계사 대표)



관성 없음을 비웃기라고 하듯, 예측할 수 없는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연평도 사건 이후 바로 중국의 부총리급인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급거 방한하여 이 명박 대통령과 독대(6자회담의 조기복귀는 어렵다는 우리측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를 하고 나서는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의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요구하는 이상한 형태의 중재를 하고 나섰다. 천인공노(天人共怒)할 행위를 한 북한의 행위를 먼저 규탄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공분을 사이기도 벅찬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을 알고나 하는 제안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여하튼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행해진 햇볕 정책의 당부를 떠나, 지금은 내부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할 사항이다. 정책의 일관성 여부는 차치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도발 등 강경노선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청춘의 꿈을 국가에 받치고 전사한 장병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쪽 저쪽에서 빵빵 터지는 것은 이런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 해 가을에는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시에 대한 개편안이 발표되어, 기득권과 부(富)의 합법적 세습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런 개편안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비리 의혹사건이 터지고, 각계의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자, 기존의 개선안의 틀을 수정하여, 다소나마 합리적 선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유 장관의 딸 특채사건 이후, 정부가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그 요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5급 공무원 특채를 행정안전부가 일괄 실시하고, 행정고시와 비슷한 유형의

필기시험을 도입하겠다는 게 개선책의 핵심내용이다. 다행히도 공채비용의 감소와 같은 대폭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외무고시의 경우는 아직도 외교아카데미라는 특수한 형태의 선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기존의 시험제도가 갖는 장점은 도외시한 채 외교아카데미를 통한 외교관 양성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공청회도 없이 국회에서의 입법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사법시험의 경우 2017년 폐지가 확정되고 한발 한발 그 끝자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로스쿨제도는 내년이면 첫 변호사시험을 통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다. 로스쿨제도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집단으로부터도 이쁨을 받는 제도가 아니게 되었다. 로스쿨제도의 소비자인 학생들은 학생대로 부실한 교육과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교수들은 교수대로 실무형 수업을 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적자만 쌓여가는 로스쿨 유치대학의 탄식, 그리고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은 대학대로 선정기준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쏟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제도에 대해 몇 가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상하게도 선진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만 하면 왜곡이 된다. 로스쿨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가지고 오려면, 온전하게 가지고 와야지, 정원제한을 한다든가, 합격자수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진입장벽을 곳곳에 쳐 두었다. 누구를 위한 로스쿨제도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다시한번 로스쿨의 경우 정원제한을 철폐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정원제한을 완화하여 25개 이외에도 학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올 해 일본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헌법상 국민의 가장 기본되는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인정된 '예비시험'을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이든 단체든 장·단기의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목적지를 향해 내딛는다. 이러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 여러 좋은 환경이 뒷받침되어 수월하게 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 보인다.

21세기 새로운 10년은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이 있듯 하루하루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시계사도 여러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지만, 지난 56여년 동안 초지 일관해 온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처음을 같이 한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친구같은 매체로 남을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외적으로 제도적 보완점을 많이 안고 있는 로스쿨제도이지만, 2012년 3월로 성큼 다가온 제 1회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의 수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본사가 준비중인 프로그램을 좀 더 다듬어 올 상반기에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